國家와 警察을
사랑하는 警友會
(www.ex-police.or.kr)

警友新聞

발행처 : 大韓民國在鄕警友會
(우 : 100-789)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전 화 : 2234-1881 FAX : 2231-7557
발행인 : 具 弘 壹 편집인 : 玄 誠 一
등록번호 : 문화다05675
1970년 12월 13일 창간

☎ 구독안내 : 02-2234-1881 National Police Newspaper 2005년 3월 4일 (금) 제1325호

警友會 중앙회 임원진

청와대 비서실장 초청 간담회 참석

- 경찰 수사권 조정 / 경우회관 마련에 대한 지원 요청 -

구홍일 경우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진이 지난 2월 17일 오전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의 초청으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경우회측에서는 구홍일 중앙회장, 조석봉·김금도·서정옥 부회장, 김정웅 서울경우회장, 이현순 이사, 현성일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측에서는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 김상환 치안비서관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홍일 경우회장은 ①지난해 제 59주년 경찰의 날과 제 41주년 경우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연설문과 축하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을 약속한바 대로 지방자치경찰제 시행과 더불어 수사권 조정 문제도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의 결단과 ②공법단체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그 위상에 비해 회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고, 국가 보조금 또는 지방비의 보조가 미약한 실정에서 조직활성화를 위한 경우회관 마련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우식 비서실장은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경우회는 지난 3월 3일 구홍일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 및 전국의 시도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 1차 이사회를 갖고 당면현안을 의결했다. 경우회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그 간의 업무실적을 보고하는 한편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과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금년도 회비결정안은 원안대로, 선거관리규정 변경안은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인권 중심의 경찰활동 강력 추진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설치

경찰청이 최근 인권경찰상 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존중의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그동안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선 치안현장의 인권의식이 국민기대에 미치지 못해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기존 경찰청 범죄피해자 대책실을 인권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일선 경찰관서 수사과장과 청문감사관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경찰 직무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인권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권수호위원회」를 경찰청에 설치하고, 지방청에는 「인권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인권침해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국민참여형 인권감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인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인권보호를 경찰활동 최고의 가치로 확립한다는 목표 아래, '인권보호경찰직무규칙(가칭)'을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현장 지도·조사기능을 강화하며, 여경수사관을 증원하는 등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장물범·여죄수사 강화를 통해 피해품을 적극 회수하고, 「이동식 피해자 조사실」을 운영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업무수행상 인권침해 취약요소를 정밀 분석, 인권 매뉴얼을 발간하고 시청각·사례중심의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체질화 할 방침이다.

3월의 예정 행사

♦ 이사회
- 일시 : 3월 3일(목)
- 장소 : 중앙회 회의실

♦ 경우산악회
- 일시 : 3월 17일(목)
- 장소 : 청계산 매봉

♦ 무궁화회
- 일시 : 3월 21일(월)
- 장소 : 기흥 컨트리클럽

지방자치경찰제 어디까지 왔나?

오는 10월 市·郡·區에 자치경찰 시범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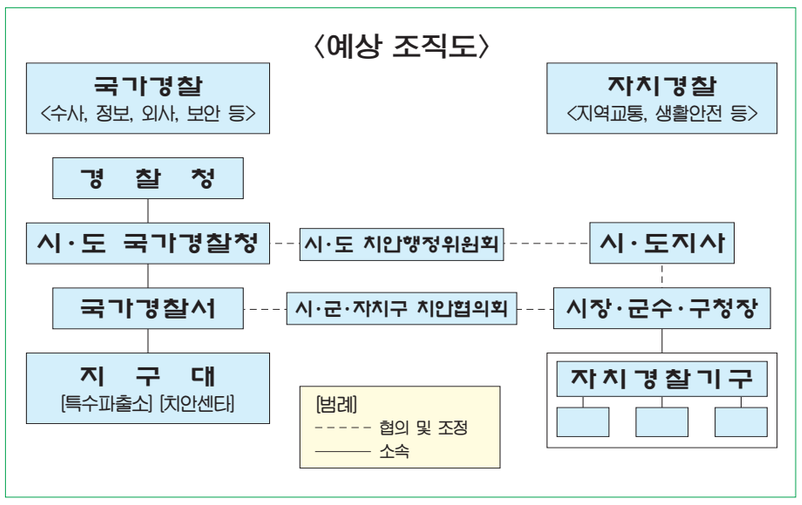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자치경찰제, 무늬만 自治"

자치경찰제 실시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16일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 2일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안업무보고에서 금년 상반기 중 법제화를 마칠 수 있도록 정부 입법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도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 20여개를 지역별로 선정하여 오는 10월부터는 시범실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주민생활에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치경찰 기구를 시·군·자치구에 병렬적으로 창설하고, 시·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를, 시·군·자치구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국가경찰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

송강호 경찰혁신기획단장은 "치안협의체에 지방의회와 공무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함으로써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물론 자치단체의 법집행력과 행정력이 결합되어 주민의 요구에 즉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뿐만아니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분담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적 치안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시·군·자치구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총경 또는 지방경정을 대장으로 하는 자치경찰대가 창설되고, 자치경찰관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 등 관련분야 112종의 공동치안사무와 함께 관할구역과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보건·위생·환경 등 행정경찰사무 50여종, 환경·식품 등 특별사법경찰사무 20여종이 자치경찰관의 사무로 명시되어 자치단체의 법집행력이 보강되고, 종합적인 행정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단속공무원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경찰기관에 기관고발 형태로 재차 수사의뢰를 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에서는 지난 2월 22일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에 대하여'란 안내책자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자치경찰제가 지역적 치안불균형을 야기하고, 광역적 치안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시·도경찰청 이하 기존 경찰조직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는 시·도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 실시를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지역경찰이 정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민 참여·감시제도나 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강남구청장 권문용)는 시·군·구 중심의 자치경찰제는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광역적 범죄 대응과 안보 등의 분야는 국가경찰이 당연히 담당하고, 국가경찰이 미처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분야의 치안과 기초질서 유지 등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기능적 분담의 필요성을 근거로 "광역치안행정수요를 이유로 시도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가권력의 분산과 지역주민의 참여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라면서, 이제 막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시점에서 도입모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여 시행 자체를 무산시키기 보다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국가·자치경찰간 업무충돌 등 자치경찰제 시행시 예상되는 현장의 문제점을 준비단계에서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의 짧은 역사와 남북분단 상황, △광역적 범죄 증가와 테러위협 등 치안환경, △기타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을 다각도로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보완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제도 정착과정을 지켜보아 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연구와 보완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 경찰청,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에서 내년 10월 전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법절차에 맞추어 5~6월경 구체적인 채용계획 발표 등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고 : 3면 / 부산 경우회관 마련 수기